

만주(동북3성)여행

-국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만주독립운동지 답사를 통해 조국을 빼앗긴 선조들이 영토도, 주권도 없는 상태에서 우선 국민만들기를 통해 해방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본다. 이 여행은 제주4.3으로 이어지면 항일운동을 통해 태어난 근대국민이 드디어 국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주제로 발전된다. 그리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은 무엇을 결여하고 있고, 무엇을 자랑삼아야할지 분별할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될 것이다.

(1) 강의 일정

1일차

연변박물관(기초강의)- 만주항일운동 역사 (연변 100년 역사)
차안강의1(2시간) 말 만들기- 근대 단어들의 출현, 인민, 국민, 민족
차안강의2(2시간) 사상 만들기- 근대의 사상과 항일운동가들의 수용과 창조
저녁강의3(2시간) 전략 만들기- 세계체계, 국가목표, 국민만들기

2일차

백두산 (이도백하 - 백두산 북파- 천문봉- 천지- 비룡폭포 온천지대)
차안강의4(2시간)- 경제만들기- 생산이나 교환이나
차안강의5(2시간)- 정치만들기- 정책, 법, 정치, 정당
저녁강의6(2시간)- 세계체계와 독립운동

3일차

간도총영사관- 천황제파시즘과 만주국
윤동주생가- 윤동주, 문익환, 장준하
명동학교- 김약연, 이동휘
313열사릉- 3.1운동과 한락연의 행로
15만원탈취지-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노선분열의 전주
버스강의7 (1시간)- 한락연을 통해 본 중국공산당과 조선족
도문 두만강나룻터- 조중관계의 성격
버스강의8 (1시간)- 중국공산당의 세계체제 구상
연길감옥터- 중국공산당과 코민테른

(2) 강의자료

1) 연변조선족 100년략사¹⁾

현재 연변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19세기중엽부터 조선반도에서 이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연속되는 자연재해와 봉건폭정통치, 그리고 일제침략폭행에 못이겨 해마다 수천수만세대가 북으로 타향살이를 떠났다. 어떤 사람들은 로씨야 프리모르스크변구일대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두만강과 압록강 북안일대에서 숨어 살았다.

두만강북안에서 대대손손 일하며 살아온 연변지역의 조선족은 한세기 남짓한 동안 갖은 풍상고초를 다 겪었다. 그들은 피와 땀으로 이 땅을 개척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또한 항일 및 해방전쟁에서 마멸할 수 없는 기여를 했다. 1949년 새 중국이 창건된 후 1952년에 연변조선민족자치구(후에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고쳤음)가 창립되고 연변의 조선족은 민족구역자치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아래에 네개 부분으로 나눠 연변조선족의 100여년간 역사를 알아본다.

제1부분

19세기 중엽부터 1910년까지

력대로 두 나라 변경지대백성들의 상호래왕은 잦았다. 더우기 조선변강백성들은 초기에 중국 땅에서 '아침에 와서 농사하고 저녁에 돌아가면서' 계절적으로 거주하다가 후에는 가족을 데리고와서 집을 짓고 장기적으로 정착 거주하는데로 발전하였다.

1654년 3월 청나라의 나선정벌 요청에 응하여 변급등을 길림으로 보냈다. 7월 흑룡강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돌아왔다. 1689년 러시아와 네르친스크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와 청나라 국경을 확정하였다. 이 조약은 만주어로 작성되었으며 흑룡강지류인 아르군 강, 케르비치 강, 외싱안령(스타노보이 산맥)사이를 경계로 하였다. 러시아군의 근거지인 알바진 성의 파괴와 월경자의 인도와 처벌, 양국민사이의 통상자유보장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후 1727년 카흐타 조약으로 외몽골과 시베리아 경계를 확정했다.

1860년이래 조선 북부에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며 1869년에는 재해가 더구나 심하였다. 살길이 막힌 조선기민들은 온 가정, 지어 온 마을이 고향을 등지고 몰래 국경을 넘어서 농사를 지었다. 하여 조선이민이 날로 늘어났는데 조선족거주구역은 두만강북안으로부터 부르하통하, 가야하 류역으로 확대되었다. 1883년 9월, 청나라정부는 조선이민들을 회유해 짜리로씨야의 침략세력과 싸우게 하기 위해 특히 '길림조선상인무역지방규약'을 제정하였다. 이 규약에 근거해 1885년에 화룡육에 통상국을 앉혔으며 광제육(오늘의 광개항 광소툰)과 서보강(지금의 훈춘시 삼가자향 고성촌)에 통상분국을 앉히고 조선의 회령, 종성, 경원 등지와와의 통상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같은 해 두만강이북 길이가 700여리이고 너비가 40~50리인 지역을 조선이민 특별개간구로 정하고 월간국(越邊局)을 설치해 전문 조선이민의 개간사무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조선이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편리를 조성해주었다.

1) 박금룡 편집, 「연변조선족 100년 략사」, 『길림신문』, 2010.9.6.를 토대로 인용 수정함.

이 시기 연변의 조선족들은 주로 황무지를 일구고 밭농사를 하였다. 1894년도에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4개 보(堡)에만도 한전 25,501정보(1정보는 약 15무에 해당함)가 있었다. 1900년도에 조선족들이 룡정 동북부의 세전이별과 룡정남부의 대교동에서 벼농사를 하는데 성공한 후로부터 연변에서 벼농사가 보급 되었다.

1905년 일본이 조선을 강박해 '을사보호조약'을 맺고 조선을 이른바 일본의 '보호를 받는 국가'로 만든 데서 광범한 조선족인민들의 강렬한 의분을 자아 내었다. 일본제국주의가 수천수만에 달하는 반일의병과 애국문화운동에 뛰어든 지식인들을 피비리계 탄압한데서 많은 반일의병과 애국지사 그리고 봉건통치를 반대하는 농민들이 망국의 비분을 안고 분분히 고향을 떠나 북으로 연변 등 중국의 동북삼성으로 들어왔다. 하여 1909년에 이르러 연변의 조선족이 9만 8,000여명으로 늘어나 연변 인구의 76.6%를 차지하였다.

1907년8월, 일본이 공공연히 헌병대를 룡정에 파견하고 청국 정부가 연변지역에 설치한 행정기구를 무시하고 비법적으로 이른바 '통감부간도파출소'를 설치하였으며 이른바 '도사장'제를 실시하고 각지에서 이른바 '도사장'과 '사장'들을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개산툰, 평강등 간도 각지의 조선족인민들이 일떠나 괴뢰'도사장'제를 반대하고 당지의 일본놈 앞잡이들을 처단하였다. 하여 '도사장'과 '사장'들은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서늘하여 분분히 사직을 선포하였으며 일본침략자가 비법적으로 설치한 괴뢰행정기구가 마비상태에 빠지었다.

1909년, 일본침략자는 청국 정부를 핍박하여 '두만강중한계무조항'즉 '간도조약'을 체결하고 연변에서의 령사관설치권, 경찰서설치권과 조선족에 대한 실제상의 령사재판권을 빼앗아 조선족인민들의 강렬한 반일정서를 불러일으키었다. 조선족반일인사들은 연명으로 길림변무공서에 서한을 보내어 '백성은 나라의 근본으로서 백성을 얻으면 나라가 강성해지고 잃으면 나라가 쇠약해질 것이며 지금 간도의 땅은 중화의 땅이고 간도의 백성은 중화의 백성임'을 천명하였다. 1910년3월 길림성 동남로관찰사서의 조선족 관원 리동춘은 일본이 조선족에 대한 '령사재판권'을 실시하는 것을 배격하고 나아가 조선족입적운동을 추진시키고 중국의 공민권을 얻으며 일본통치의 멍에서 벗어나기 위해 '간민교육회'를 건립하도록 발기하고 '월보를 발행해 민중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각지의 조선족사립학교들을 위해 교과서를 편찬하고 반일사상을 주입하였다.

1906년도에 조선족반일지사 리상설이 룡정에서 반일사립학교인 서전서숙을 꾸리고 철저한 민족주의교육과 반일계몽교육을 실시한 이래 조선족반일사립학교는 연변 각지에 우후죽순마냥 건립되었다. 선후로 창립된 명동, 창동, 정동, 광성 등 많은 반일학교들은 모두 당지에서 반일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반일투쟁전개의 여론진지로, 행동중심으로 되었다. 거의 40년에 달하는 조선족인민의 곱절적인 반일투쟁이 이때로부터 서막을 열었다.

제2부분

1910년부터 1931년'9.18사변'까지

1910년 8월,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후 연변에 이주한 조선인들은 거의 모두 일본제국주의 파썃폭행에 견디지 못해 두만강을 넘어 중국에 이주했다. 1910년부터 1926년까지 도합 126,964명이 이주해왔고 1931년에 이르러 연변조선족인구는 406,341명으로서 동삼성 조선족 총인구의 64.6%를 점하였다.

조선인의 대량적인 이주는 연변지구 대면적수전 개발에 인력 및 기술면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1926년에는 이미 155개소의 사립학교가 있었는데 재학생수가 3,829명에 달해 연변은 동삼성에서 학교밀도가 제일 높은 지방으로 되었다. 각 사립학교들에서는 반일'철혈정신'으로 대량의 반일군정인재들을 양성했다. 1912년, 반일인사 서일은 왕청현에서 '중광단'을 조직하고 반일민족주의를 전파했다. 1913년 지장훈, 강수희, 등 반일인사들은 동성용에서 '사우계'를 건립했다. 같은 해 김약연, 리동춘, 백옥정, 김립 등 사람들은 '간민교육회'의 토대우에서 '간민회'를 창립하고 반일문화계몽운동을 광범위하게 벌렸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조선 '3.1'반일독립운동의 추동하에 이미 상해와 로씨야연해주의 반일독립운동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확보하고 또 이들의 영향을 받은 연변의 반일인사들은 즉시 호응하여 반일대폭풍을 일으킬 준비를 하였다. 그해 3월13일, 연변각지에서 온 30,000여명의 조선족농민과 사립학교사생들은 일본총령사관소재지 룡정에 모여 연변력사에서 규모가 전례없는 반일집회를 갖고 반일독립선언서를 읽고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죄행을 성토했다. 일부 한족학생도 시위행진대오에 가담했다. 일제의 압력하에 지방당국은 조선족인민의 평화시위를 잔혹하게 탄압했는데 당장에서 10명이 숨지고 40명이 상했으며 7명의 중상자가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3월 17일, 1,500명의 조선족군중은 수난자들의 시체를 들고 항의시위행진을 단행했다. 4월말까지 도합 86,670여명의 연변조선족군중이 여러지역에서 반일집회와 시위행진에 참가했다. 관준언 등 형제민족반일인사들은 천방백계로 체포당하게 된 조선족반일인사들을 엄호하고 피신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일제군경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했다.

1920년 여름, 연변조선족반일부대 '독립군'은 이미 2,900여명의 장병들과 2,600여자루의 보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중 홍범도, 박경철이 거느린 명월구의 의군단, 구춘선과 안무가 지휘하는 의란구의 국민회군, 최명록이 창립한 봉오동의 '군무독군부'군대, 서일과 김좌진이 거느린 왕청현 서대파의 '북로군정서'부대 등이 있었다.

1920년 6월 7일, 홍범도와 최명록이 지휘한 반일부대는 봉오동에서 조선주둔 일본군제19사단에서 파견한 '월강추격대'(260여명)를 매복, 습격하였고 수십명을 섬멸하였다. '봉오동전투'는 조선족반일무력이 동북경내에서 일본정규군을 대량으로 소멸한 첫 전투였다.

봉오동에서 참패를 당한 일본침략자들은 연변의 조선족반일부대를 소멸하기 위하여 1920년 10월 2일에 '훈춘사건'을 거리낌 없이 도발하고 2만명에 달하는 일본정규군을 무어 피비린 '경신년토벌'을 발동했다. 그들은 2,285명에 달하는 조선족민중을 살해했고 2,507세대에 달하는 민가를 불살라버렸다. 10월 하순 홍범도와 김좌진이 거느린 반일부대는 화룡현 삼도구의 청산리, 이도구의 완루구, 어랑촌 874고지 등 곳에서 일본군을 련속 전승하여 근 천명에 달하는 적을 섬멸함으로써 일본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연변지구조선족인민들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영웅적기개를 과시하였다. 이 '청산리전역'은 연변지구에서의 반일민족주의운동의 최고봉을 표징하였다.

1920년초에 조기 공산주의자인 리동휘 등이 상해에서 조선문인쇄공장을 세워 '공산당선언'을 비롯한 많은 진보적 서적과 간행물을 번역출판하였다. 이런 서적과 간행물들은 곡절을 거쳐 연변에 전해와 갈수록 많은 청년학생과 농민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사회과학연구회', '맑스주의 연구회', '독서회'등 진보적 단체를 내와 맑스주의를 전파하고 로씨야 10월혁명을 선전하였다. 1921년 12월, 돈화에서 '고려공산당중앙총감부'를 세웠는데 그 산하에 1,300여명의 당원이 소속되어있었다. 1923년에 또 고려공산당간도지방회 및 그 '행동조직'인 '적기단'을 세웠다. 1924년 12월에 박윤서를 위수로 하는 '만주고려공산청년회'도 나타났다.

1921년 7월과 10월 룡정에 선후하여 대성중학과 동흥중학을 세웠는데 김사국이 대성중학에 세운 '동양학원'은 한때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사상진지로 되었다. 1926년 1월에 이르러 57개 청년단체들로 구성된 '동만청년총련맹'이 룡정에 세워져 수천수만명에 달하는 연변청년들이 점차 혁명의 길에 들어서게끔 하였다.

1927년 10월 중국공산당만주성림시위원회가 성립됨에 따라 1928년 2월에 성위에서 사람을 연변지구에 파견하여 룡정에서 '민정보'를 꾸린다는 명의를 내걸고 당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룡정총당지부를 창립하였다. 이것이 연변의 첫 당지부이다.

1930년 초에 이르러 국제공산당의 '일국일당'의 지시에 좇아 조선공산당은 해산을 선포했고 당원들은 개인의 신분으로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 이로부터 조선족인민들은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반일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1930년 5월 연변의 조선족인민들은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붉은오월투쟁'을 발동하였다. '5.30폭동'을 일으킨 폭동대오는 일본주구의 주택 19채를 불살라버렸다. 룡정의 폭동대오는 대흥전 등 회사를 습격, 파괴하였고 '동척간도출장소'를 습격하였으며 철교 한곳을 파괴하였다. '붉은오월투쟁'에서 강학제 등 50여명이 피살되었고 김철 등 85명이 체포당했다.

'붉은 오월투쟁'과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지방폭동'에서 건립된 신춘을 대장으로 하는 평강유격대, 김세훈이 거느리는 라자구유격대, 김명균이 지휘하는 돈화유격대 등 홍색유격대는 중국 공산당이 동북지구에서 로농무력을 건립하는 첫시험으로서 '9.18'사변후 중국공산당령도하에서의 반일유격대창건에 일정한 경험을 쌓았다.

제3부분:

1931년'9.18'사변으로부터 1945년'8.15'광복에 이르기까지

비록 1931년도에 일본침략자들이 '9.18'사변을 발동하여 무력으로 동삼성을 점령하였지만 그들은 조선에서의 저들의 파쇼통치를 결코 쇠약시키지 않았다. 하여 한패 또 한패의 조선인들이 그자들의 유린에 못이겨 조선반도로부터 연변에 이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연변 5개 현의 조선족인수는 1933년의 405,953명, 1934년의 421,941명으로부터 1935년의 453,345명으로 점차 늘어났다. 1936년 8월, 일본관동군사령부에서 '재만조선인지도요강'을 조작해가지고 해마다 만세대 5만명의 '조선이주민'들을 연변과 동변도의 23개 현에 이주시켜 '기아수출'로 조선의 '식민위기'를 완화하며 조선족의 피땀을 일층 착취하려 시도했다. 1937년부터 1941년 사이에 강박에 의해 연변에 이주한 '집단적이주민'과 '집합이주민'은 32,176명에 달한다. 1941년 12월에 일본파쇼가 태평양전쟁을 발동했다. 동북에서 더욱 많은 논밭을 개발하여 동북을 '대동아전쟁'의 '량곡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조선이주민'을 '개척민'으로 탈바꿈하였다. 1941년부터 1944년 사이에 동북에 이주한 조선족은 64,887명에 달한다. 1944년에 이르러 연변의 조선족인구는 631,733명에 달하여 동북3성조선족인구 총수의 38%를 점했다.

'9.18'사변후 중공만주성위에서 제정한, 조선족에 대한 기본정책은 전적으로 조선족인민들의 리익과 념원에 부합되었다. 이리하여 조선족당원간부와 군중들의 반일적극성을 전례없이 불러 일으키었다. 연길, 화룡, 왕청, 안도 등지의 현위 및 각 구위 서기는 모두 조선족이 담임하였다. 연변조선족인민들은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서 한차례 또 한차례의 반일무장투쟁을 발동하였다. 1931년 가을에 있는 '추수투쟁'과 1932년 봄에 있는 '춘항투쟁'은 모두 앞으로의 무장 반일투쟁에 군중적토대를 닦아놓았다. 이어 김철을 대장으로 하는 왕청반일유격대, 박동근을 대장으로 하는 연길반일유격대, 김세를 대장으로 하는 화룡반일유격대, 공헌침(한족)을 대장으로 하는 훈춘반일유격총대를 세웠다. 이런 유격대를 모두 '동만유격대'라 불렀는데 4백여명의 장병이 있었다. 그중 조선족이 90%이상을 점했고 당원, 단원이 80%이상을 점했다.

1932년 4월부터 일본군'간도림시파견대'가 연변지구를 전면적으로 '소탕'하기 시작하였다. 1932년 11월부터 중공동만특별위원회와 각 현위에서는 선후하여 연길현 왕우구, 석인구, 왕청현, 가야하, 훈춘현 대항구, 연통라즈에서 구일급의 소비에트정부를 건립했고 또 의란구의 남양촌 등 여섯 곳에서 '혁명위원회'를 건립했다. 이를 일컬어 '동만유격 근거지'라 하였는데 20,000여명의 민중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중 조선족이 95%이상을 점하였다. 이는 '만주에서 가장 큰 유격구'였다.

1932년 11월부터 1933년 봄까지 일본침략자들은 일위군경, 자위단수천명을 출동시켜 동만반일유격근거지에 대한 '토벌'을 발동하여 잔포하게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빼앗고 모조리 죽여버리는 '3광'정책을 실시하였다. 1932년 2월 12일 '어랑촌보위전'에서 13명 조선족유격대원들이 400명이나 되는 적들과 피어린 전투를 벌렸다. 하여 그들을 '어랑촌13용사'라고 부른다. 1933년, 동만반일유격대는 토벌하러 온 적들과 150여차 혈전을 벌려 적들의 제1차'대토벌'을 분쇄하였다.

1933년 11월부터 1934년 봄 사이 일본침략자들은 6천여명을 모아가지고 동만유격근거지에 대한 제2차'토벌'을 발동했다. 동만유격대는 백여차의 혈전을 벌려 적들의 진공을 물리치었고 대오를 부단히 장성, 강화하였다. 대오는 1933년10월의 700여명으로부터 1934년 초의 900여명으로 늘어났다. 1934년3월, 중공동만특별위원회는 연길현 삼도만 능지영에서 각현 유격대 책임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중공만주성위의 지시에 좇아 동만유격대를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로 개편했는데 주진이 사장을 맡고 왕덕태가 정위를 담당했다. 1935년 5월 30일, 정식으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군부를 왕덕태가 군장직을 맡고 위등만이 정위직을 맡았으며 산하에 4개 탄, 한개 유격대를 두었으며 모두 1,200여명이었는데 조선족이 3분의 2를 차지했다.

1934년 9월부터 1935년 봄사이 일본놈들은 동만유격근거지에 대한 제3차'토벌'을 발동했다. 이른바 '반 민생단투쟁'중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은 연변 각 현의 당, 단, 군중조직 및 인민혁명군은 준엄한 시련에 직면했다. 연길, 화룡, 안도 각 현의 당조직, 근거지정부 및 부대는 안도현 처창즈(지금의 화룡현 와룡향 화안툰일대), 왕청, 훈춘 두개 현 근거지 정부 및 부대들은 라자구에 전이하여 각기 새로운 유격구를 개척하여 간고한 무력투쟁을 견지했다. 1935년 6월, 라자구유격근거지의 부대는 북만으로 진군하여 후보중 장군이 령도하는 동북반일연합군 제5군과 승리적으로 회사했다. 1935년 11월, 처창즈유격근거지의 군민들은 내두산으로 전이하여 적

들의 두차례 진공을 물리치고 1936년 2월 호호탕탕하게 남만으로 진군하여 양정우장군이 인솔하는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과 승리적으로 회사했다.

1936년 3월초, 동만 당 및 인민혁명군간부회의가 안도현 미혼진에서 소집되었다. 회의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을 동북항일련군 제2군으로 확충했는데 왕덕태가 군장을 맡고 위증민이 정위를 맡았으며 안보학, 사충항(진한장동지가 대리), 김일성이 각기 제1,2,3,사 사장직을 맡았다. 전군은 2천여명으로서 조선족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1936년 6월 무송현 동강에서 가진 동북항일련군 제2군 군,사급간부회의 즉 '동강회의'와 같은 해 7월 금천현 하리에서 가진 동만, 남만당 및 제1, 2군 주요지도간부련석회의 즉 '하리회의'에서는 조선족들 가운데서 극히 비밀적인 '조국광복회'를 건립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리회의에서는 동, 남만당위를 중공남만성위로 합병하기로 결정짓고 위증민을 서기로 임명했으며 동북항일련군 제1,제2군을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으로 편성하고 양정우를 총사령관으로, 왕덕태를 부총사령으로 임명하였다. 이때부터 제2군 제1, 2, 3사는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 제2군 제4, 5, 6사로 되었다.

항일련군 제2군의 제4사와 6사는 주로 남만에서 싸우고 제5사는 주로 북만에서 싸웠다. 1939년부터 1940년 봄까지 각 사는 연변각지에서 종횡무진으로 싸우면서 적들의 기명을 꺾어놓았다. 1939년에 제4사, 5사로 개편된 제3방면군은 안도현 대사하전투, 돈화현 한총령전투 등 규모가 비교적 크고 전과가 뚜렷한 전투를 진행하였다. 1940년 3월 5일, 제6사를 개편한 제2방면군은 김일성의 지휘하에 화룡현 흥기하부근에서 일본 '마에다경찰토벌대'를 매복습격해 140여명을 격사하거나 생포했는데 력사상 이를 '흥기하전투'라 부른다. 이 전투는 '공산군이 몰살되었다'는 거짓말을 발가놓았다.

1940년도에 이르러 일본관동군은 70만명으로 늘어났다. 30,000여명에 달했던 동북항일련군은 다년간의 혈전을 거쳐 병력이 날로 감소돼 1,000여명 밖에 남지 않았다. 1940년 가을, 연변인민의 자제들로 구성된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의 제2,제3방면군은 혁명력량을 보존하고 항일전쟁의 최후승리를 맞이하기 위해 선후로 쓰련경내로 이동해 야영훈련과 소부대활동을 벌리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1941년부터 1945년 8월까지 항일련군소부대는 수차 라자구, 천보산, 개산툰, 차조구, 연길, 훈춘, 도문 등지에 와서 적정을 정찰하고 항일군중단체를 건립하거나 회복하고 적의 초소거나 군사기지를 습격하였다. 간고한 소부대활동에서 려영준, 김명주를 비롯한 로전사들이 전공을 여러번 세우고 1로군부관 곽지산을 비롯한 일부 조선족동지들이 목숨을 바쳤다. 항일련군의 소부대활동은 쓰련홍군이 재빨리 일본관동군을 소멸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수 기여를 하였다.

연변인민의 자제병들이 14년에 달하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의 지지, 배합과 갈라놓을 수 없다. 이를테면 팔도금광의 광부들은 항일유격대에 의복, 신발과 화약, 퇴관을 가져다주었고 해마다 추수계절이 되면 각지의 농민들이 량식을 받머리거나 산기슭에 묻어두어 자제병들이 가져가게 했으며 각지의 '지하당원'들은 갖은 방법으로 정보나 무기탄약을 자제병들에게 가져다주었다. 1942년부터 1944년까지 공청단원 최봉선은 라자구에서 '경성사진관'을 꾸린다는 명의를 내걸고 적들의 정보를 끊임없이 항일련군소

부대에 제공했으며 공산당원 김명주, 리영춘은 연길감옥에서 탈옥투쟁을 조직해 성공하여 수십명 동지를 유격근거지에 데려갔다. 각지의 광부들은 파업을 단행해 적들의 전쟁시기경제계획을 파탄시켰으며 각지의 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단행하여 적들의 '황민화'운동을 반대하였다.

총적으로 말하여 위대한 항일전쟁가운데서 조선족인민과 형제민족인민들은 어깨걸고 피어난 싸움을 벌여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항일전쟁의 승리를 위해 거대한 대가를 치르고 불후의 공헌을 하였는바 무려 3,125명의 련사가 나타났다. 그중 조선족이 3,026명이나 된다.

제4부분:

1945년'8.15'광복으로부터 1952년9월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까지

1945년 8월 8일에 소련은 대일선전포고를 하였다. 8월 14일에 소련홍군은 훈춘, 왕청 두 곳으로부터 연변에 들어왔으며 8월 18일에 연길을 해방하였다. 19일에 연변 각족 인민들은 룡정에서 성대한 소련홍군환영대회를 가지고 항일전쟁의 승리를 열렬히 경축하였다. 연길, 룡정, 조양천 등 연변각지의 인민들은 노동자, 농민, 청년, 부녀 동맹을 비롯한 혁명군중단체와 별동대, 보안대 등 자위무장을 조직하여 당지의 왜놈잔여세력과 결사적인 투쟁을 진행하였다.

1945년 9월 18일에 중공동북위원회연변사업위원회 즉 동북항일련군연변분견대의 강신태를 비롯한 이들이 연길에 진주하였다. 중공연변지위, 연변전원공서와 연변군부가 잇달아 창립되어 공고한 동만근거지를 건립하기 위하여 정치적 및 조직적 토대를 닦아놓았다.

광복 후 연변에 잠입한 국민당분자는 만여명의 왜놈잔여세력을 긁어모아 토비무력을 조직하여 완강히 대항하였다. 라자구일대의 토비무력은 단번에 무고한 조선족군중 100여명을 살해하였다. 토비를 숙청하고 공고한 동만근거지를 창립하기 위해 연변경비대에서는 다섯달 동안의 전투를 거쳐 5개현의 토비 4,000여명을 소멸하고 보총 1,431자루, 기관총 76정, 화포23문을 로획하였다. 1946년 7월에 돈화에 등지를 틀고 있던 토비들도 기본상에서 숙청되었다.

일본제국주의 주구를 청산하는 투쟁은 왜놈잔여세력을 숙청하는 중요한 구성부분이기도 하였다. 1946년 4월에 룡정에서 만명군중이 참가한 왜놈주구청산대회를 열고 정사빈을 비롯한 일본제국주의의 주구와 특무를 처단하였다. 같은 해 10월 연길에서 1만명 군중이 참가한 '해란강참안청산대회'를 소집했는데 대회는 련속 7일간 계속되었다. 동북과 조선 각지에서 온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 600여명이 대회에 참가했으며 30여명의 피해자와 그의 육친들이 일본놈 및 그의 주구들의 하늘에 사무치는 죄행을 공소하였다. 대회에서는 두 손에 선혈이 가득 묻은 흉수 7명을 처단하였다.

1945년 11월 미국의 부추김 밑에서 장개석의 국민당군대는 동북에 대한 대규모적인 진공을 발동하였다. 국민당군대는 금주, 심양, 사평, 장춘 교하를 점령한 후 '한주일내에 두만강까지 점령하겠다'고 떠들어대었다. 연변경비력의 용사들은 교하, 라법, 신참 등 지대에서 국민당군대와 완강한 전투를 진행하여 그들의 진공을 물리치고 연변대지를 보위하였다.

토비숙청과 왜놈주구청산투쟁의 승리는 국민당의 사회토대를 짓부셔 놓았으며 각족 인민의 계급적각오를 제고시켰고 토지개혁에 유력한 군중토대를 닦아놓았다. 1946년 7월부터 1948년 4월까지 연변 각족 인민들은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서 만강의 혁명열정으로 토지개혁에 뛰어 들었다. 조선족농민들은 진정으로 토지의 주인으로 되었다. 토지를 분여받고 각급 정권을 장악한 연변조선족인민들은 전례없는 참군참전열정을 보여주었다. 부자, 부부, 형제 사이에 앞 다투어 참군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연변에서 5만2,000여명의 청장년이 용약 참군했는데 그중 85%가 조선족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동만독립사, 동북민주련군 제10종대 제28사, 29사,30사에 편입되었다. 그들은 선후로 동북해방전쟁, 평진전역, 도강전역에 참가했으며 후에 또 광서, 해남도 전역에 참가하였다. 그들 중에서 동만 경비려 1탄의 탄장 박락권을 비롯한 4,313명의 련사가 용솟음쳐 나왔는데 그중 3,713명은 조선족이었다. 또 '김성범전투모범련', '강철8련', '로농영웅련'등 많은 영웅집단과 특등공신 한국화, '1급인민영웅' 김천덕을 비롯한 290여명의 전투영웅이 나타났다.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의 전선지원열정도 대단하게 높았다. 그들은 담가 3,720대와 수레 19,000대를 동원했으며 전선지원에 참가한 민부수는 연인수로 302,300여명에 달하였다. 민부들 중에서 3,434명의 립공자가 나타났다. 대다수 청장년들이 참군참전했기에 후방의 농업생산, 전선지원, 련군속무휼사업, 반간첩투쟁 등은 모두 녀성과 로인들이 감당하였다. 그들은 사심없이 13,563세대 련사유가족과 군인가족의 농사일을 도와줌으로써 해방전쟁의 승리에 기여하였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다. 연변각족인민들은 당과 정부의 령도하에 농업, 공업과 교통운수, 우전, 상업, 무역, 교육, 문화 등 여러 사업을 회복, 발전시켰다. 1950년 6년 조선전쟁이 일어났다. 미군을 위수로 하는 '련합국군'은 인천으로부터 상륙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거 진공하였다. 연변 각족 인민들은 당과 정부의 호소를 받들고 전국인민들과 한길에서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적극적으로 참군참전하였다. 1952년 9월 3일,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의 빛발아래 연변조선민족자치구가 정식으로 창립되었다. 조선족의 다년간의 숙원이 마침내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새 중국에서 현실로 되었다. 1955년 12월에 열린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기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에서는 1954년 9월에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헌법규정에 좇아 연변조선족민족자치구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고치였다.

총체적으로 백여년래 시종 민족압박에 시달리던 조선족 인민들은 끝끝내 중국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자치지방의 주체민족으로 되었고 나라의 주인공적 권리를 갖게 되었으며 참된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

2) 만주독립운동에서의 국민 만들기

이시우

1910년 뜻있는 지사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나 영토도 없다. 주권도 없다. 무엇을 할 것인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 만

들이기 시작되었다.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르조아는 자기의 모습대로 세계를 창조한다.” 항일혁명가들의 뇌리 속엔 아마도 다음과 같은 구호가 맴돌았을 것이다. “국민은 자기의 모습대로 국가를 창조한다.” 민족, 인민, 국민, 인권, 주권 같은 단어는 1890년까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단어들이다. 아편전쟁 이후 양무운동시기의 구호였던 동도서기, 중체서용, 화혼양제는 급속하게 변법자강, 서도서기, 탈아입구로 달려갔고 영국의 천부인권론과 자유론, 프랑스의 혁명주의를 거쳐 독일식 입헌군주제로 수렴됐다. 유럽에서 200여년에 걸쳐 이루어진 변화가 일본과 중국에서 짧게는 20여년 만에 이루어졌다. 조선은 1910년 대한제국이 강제 병탄된 뒤 1919년 상해 임시정부수립에서 제국이 아닌 민국을 선포한다. 불과 10년 만에 군주정으로부터 공화정이, 제국으로부터 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왜 공화정과 민주주의의 도입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인가? 왜 그 시도의 중심이 만주와 연해주였는가? 민국의 모태가 한반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갖는 결정적인 한계는 무엇인가? 이 짧은 기간 동안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동성이자 한계이다. 그리하여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은 1920년대를 거쳐 민족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민주공화국에서 인민공화국으로의 급속한 변화를 요구받는다. 이동휘, 신채호, 박은식등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사상은 대부분 3번에서 4번의 급격한 변화 시기를 겪는다. 대부분 조선의 유학자들이었던 이들 지도자들을 10년 만에 한번 씩 만나본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신채호, 박은식을 만났을 것이다.

독립운동과정에서 우리는 두 개의 ‘국민’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해방과 함께 그들이 만든 국가는 그 경험에 따라 두 개의 정부가 되었고, 결국 두 개의 국가가 되었다. 남북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개성공단에서 이 두 국민이 서로 생활하기 시작했을 때 같은 민족, 다른 국민임을 경험한다. 이곳 만주에서 역시 조선족은 같은 민족정체성을 너무 쉽게 확인하지만 국가정체성은 엄연히 다른 한국과 중공임을 확인하게 된다.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의 국민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통일을 영토와 주권과 국민을 동시에 합치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결과는 전쟁일 것이다. 1910년과 다른 점은 영토와 주권은 물론 국민도 하나가 아니란 사실이다. 그러나 영토와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만들기를 시도한 연유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영토는 외적인 조건이고 주권은 국민이 독립하면 획득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사람에게서 그 답을 찾은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명철한 판단이었다. 지금도 역시 사람에서 출발해야 한다.

1. 말 만들기

아시아의 근대를 만든 핵심단어들은 중국, 특히 일본을 통해 만들어졌고 조선은 그 단어들을 일방적으로 받아쓰는 입장이 되었다. 그러나 말은 단어자체의 의미보다 맥락이 중요한 것이다. 설령 일본의 제국주의적 지배의도가 담긴 단어라 해도 우리는 우리사정에 맞추어 변형시켰고 우리만의 개념으로 유통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맥락으로 의미를 활용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사상의 한계이고 국가건설 구상의 한계가 되며 국민 만들기의 한계가 된다. 선혈들은 무장항쟁과 함께 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싸워야 했다.

사회

정부나 국가와 구별된 의미에서 사회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은 1877년(메이지10년)경 부터이다. 그때까지는 회사라고 했다. 회사는 Company의 뜻으로도 쓰이지만 사회라는 의미로도

쓰였다.²⁾ 후쿠자와 유키치는 『서양사정』(1868)에서 Society를 交際, 人間交際, 交國, 世人 등으로 번역하였다. 지금과 같은 의미로 ‘사회’가 일반화 된 것은 후쿠자와의 『학문을 권함』(1872~1876)이후이다. 후쿠자와는 사회를 개념적 용어로서 긍정적으로 사용한 반면 世間(세켄)은 구체적 일상적 용어로서 부정적 뉘앙스로 사용했다.³⁾ ‘사회’가 정착된 이후 공적인 무대에서 세켄은 사라진다. 1905년 국가가 접히자 지식인들은 국민을 불러내기 시작했다. 국가도 호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불러낸 개념 속으로 사람들을 집어넣기 시작했다. 이것이 독립신문등 애국계몽운동의 역할이었다. 교양시민들이 국민을 불러들이면 다음과 같이 호소한 것이다. ‘당신들이 국민이 되어야 국가를 만들 수 있다.’ 개별국민들의 자격을 논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회라는 말을 발견한 것이다. 드디어 조선역사에서 등장한 적 없는 자발적 결사체(시민의 맹아)가 만들어졌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서북학회등이 그것이다. 사대부계층은 학회나 학교를 설립하는데 학회는 요즘의 전문학회가 아니라 시민들이 모이고, 교양시민이 끌여가는 협회(association)이었다. 서민층은 조합과 야학을 만든다. 물장수 야학, 구두담이 야학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서민층의 자발적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결사체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사회(society)조직이다. 이것은 조선역사에서 나타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아시아의 천하질서는 왕과 백성간의 직접적인 관계만이 존재할 뿐 그 사이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사회였다. 조선을 방문한 이사벨라 비숍은 덕수궁 앞을 지나면서 뭔가 모르게 부산하게 오가는 조선 사람들을 보고 중세적 행렬이라며 의아해했다. 그러다 일 년이 지난 뒤에야 이 중세적 행렬이 근대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조직적 움직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일제강점으로 중단된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을 경험하기까지 우리는 ‘사회’적 인간으로의 결핍을 안은 채 살아왔다. 이제는 ‘사회’란 말을 누구나 사용하고 있지만 세월호에서 해경이 선원들만을 구출하는 장면은 우리가 결여한 ‘사회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건이었다. 과연 국가이든 개인이든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란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직도 사회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것이다.

인권

인권이 먼저냐 주권이 먼저냐는 논의는 근대 초 심각한 논쟁거리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유럽정치사상사에서는 인권이 있기에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두가지를 연결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것이 나누어졌다. 인권 쪽이 자유와 연결되고, 민권 쪽이 평등과 연결되는 식으로 말이다. 즉 자유로부터 분리된 평등과 인권으로부터 분리된 민권이 생겨났던 것이다.⁴⁾ 일본 파시즘시기의 익찬회운동을 민주주의적 위장이라고 한다면 나치가 바로 그렇다. 개인적 자유는 제로에 가깝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의 『사회정학』(社會靜學 Social Statics)은 마쓰시마 쓰요시(松島 剛)가 『사회평권론』(社會平權論)이라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좀 이상하다. ‘평권론’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마치 평등주의적인 양 들린다. 그래서 스펜서의 이 책은 자유민권운동가의 성전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스펜서는 평등이 아닌 적자생존을 내용으로 한 사회진화론을 제창했다. 메이지10년대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사람이다. 『사회평권론』으로 간행되자 폭발적인 판매고를 올려 “몇 십만부가 팔렸는지 모른다”고들 했다. 이타가

2) 마루야마 마사오, 가토 슈이치/ 임성모 역, 『번역과 일본의 근대』, (서울: 이산, 2000), p.130

3) 柳父章, 『翻譯語成立事情』, (岩波新書, 1982), pp.7-19; 마루야마 마사오, 가토 슈이치/ 임성모 역, 『번역과 일본의 근대』, (서울: 이산, 2000), p.205 note

4) 마루야마 마사오, 가토 슈이치/ 임성모 역, 『번역과 일본의 근대』, (서울: 이산, 2000), p.90

키 다이스케(板垣退助)가 ‘민권의 교과서’라고 평가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⁵⁾

그런데 자유민권운동은 서양인이 번역하는데 애를 먹었다. 지금은 freedom and people's right movement라는 번역어가 정착되었지만 처음엔 희한하게 여겼다. 곧 people's right라는 건 없다는 것이다. right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권리여서 민권이라는 의미로 되지는 않는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를 간파하고 일본지식인들이 인권과 참정권을 혼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은 개인의 권리지 인민의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인권 곧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인민이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민권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개인과 일반시민의 구별이 없다고 후쿠자와는 지적한다. 그가 집합개념으로서의 인민의 권리와 개개인의 개별적인 권리를 구별한 감각은 탁월하다. 이 말을 번역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프랑스 민법의 번역에서도 알 수 있다. 미쓰쿠리 린쇼(箕作麟祥)가 프랑스어 droit civil을 민권이라고 번역했다. 그런데 그것은 재산권등 민법상의 사적 권한을 말한다. 자유민권론과 다르다. 똑같은 droit civil을 한쪽에서는 엄밀하게 인권이라 번역하고 다른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된다는 이유로 민권이라 해버리는 것이다.⁶⁾ 이 역시 일본어에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없기 때문이다. 후쿠자와는 민권론으로 국권론과 타협했다고 해서 좌익으로부터 나쁜 평판을 받았다. 인민의 권리에 대해 그는 공리주의적이어서 결코 급진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인권에 대해서는 만년까지 줄기차게 이야기 했다. 메이지유신 초기부터 이런 식으로 구별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메이지 10년대의 유명한 유행가 가사 “좋잖아, 시빌이야 아직 부자유스러운들 폴리티컬이라도 자유롭다면”같은 것은 위압적이다. civil right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는 것이다. political(right)이란 참정권을 말한다. 이리되면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건 시간문제인 셈이다. 바이마르 헌법이 만들어지자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는 유명한 조문이 생겼다.⁷⁾ 그건 프랑스 혁명 이래 사유재산의 절대화에 대해 명백하게 유보를 단 최초의 헌법조문이었다. 미쓰쿠리 린쇼(箕作麟祥)는 1887년 프랑스어 droit civil을 민권이란 조어로 번역한 것이 자기라고 1887년 연설에서 말했다. 그러자 “백성에게 권력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나”는 논의가 일어나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최제우는 아이도 한울님이니 때려선 안된다고 했다. 경술국치를 당하자 석주 이상용은 안동 임청각을 팔아 만주로 떠나며 노비들을 모두 해방하고 “너희들은 이제 자유니 원하는 사람만 나를 따르라”고 했다. 갑오농민혁명 이후 시민, 국민의 출현 가능성이 좌절된 채 10여년 넘게 논쟁되던 자유와 인권논의는 석주의 이 행동에서 급격하게 매듭지어짐을 알 수 있다. 자유와 인권없이 여전히 왕을 위해 싸우라는 말이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인권을 발견한 것이다.

국제

국제(國際)라는 표현은 영국의 벤담(Jeremy Bentham)이 1789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international이라는 용어를 번역한 것이다. 중국에서 1864년 선교사 마틴(William Alexander Martin 1827-1916)이 미국의 국제법학자 휘턴(Henry Wheaton, 1785-1848)의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만국공법』으로 번역출간 한 이후, 동아시아에 유럽 기원의 국제법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책자가 되었다.⁸⁾

5) 마루야마 마사오, 가토 슈이치/ 임성모 역, 『번역과 일본의 근대』, (서울: 이산, 2000), p.54

6) 마루야마 마사오, 가토 슈이치/ 임성모 역, 『번역과 일본의 근대』, (서울: 이산, 2000), p.88

7) 마루야마 마사오, 가토 슈이치/ 임성모 역, 『번역과 일본의 근대』, (서울: 이산, 2000), p.89

8) Henry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Little Brown and Company, 1855); 박배근, 「한국 병합조약관련의 효력과 국가대표의 매수」 『서울국제법연구』제17권 제2호 통권33호, (서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0.12), p.170

블룬첼리(Johann Caspar Bluntschli, 1808-1881)도 당대 유명한 국제법학자였으며⁹⁾ 그의 책도 중국에서 ‘공법회통’으로 번역되어 한국과 일본에도 알려진 바 있다.¹⁰⁾ 예일대학 총장을 역임한 울시(Theodore Dwight Woolsey, 1801-1889)도 휘튼과 마찬가지로 19세기 미국국제법학회의 권위자로 인정받았던 학자로 그의 책 역시 중국에서 『공법편람公法便覽』이란 이름으로 번역 출판된 바 있다.¹¹⁾ 1873년 미쓰쿠리 린쇼가 울시(Theodore Woolsey, 1801-1889)의 『국제법 연구입문』(Introduction of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1860)을 번역하면서 ‘국제법’이란 말을 사용했다.(『國際法, 一名萬國公法』), 이후로는 ‘만국공법’ 대신 ‘국제법’이란 용어가 일반화 되었다. 1881년(메이지14) 도쿄제국대학에 ‘국제법’이라는 과목이 개설된 것이 그 상징이다.¹²⁾ 1877년 12월 17일 일본공사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가 예조판사 조영하(趙寧夏)에게 『성초지장(星 指掌)』과 『만국공법』을 기증했다는 『왜사문답(倭使問答)』과 『왜사일기(倭使日記)』, 『선린시말(善隣始末)』 등의 기록이 조선에선 국제법을 접한 최초의 기록이다.¹³⁾ 1873년 미쓰쿠리 린쇼에 의해 울시의 책을 『국제법연구』란 제목으로 번역한 상태였는데 『만국공법』을 기증한 저의는 국가 간의 법이 아니라 무조건 따라야 할 법이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교묘한 것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국제’는 국가 사이의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국가들 위에 수직적인 관계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자유

자유란 한자에는 ‘스스로 말미암다’라는 뜻이 있다지만 영어의 freedom 이나 liberty에는 그런 뜻이 전혀 없다. 그러나 자유를 ‘마음대로’라고 보는 의미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에도 포함되어 있다. free란 말의 어원인 인도유럽어 priio는 ‘자신의 손’과 같이 자신의 몸 일부를 나타내거나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혈족’과 같이 혈연관계를 뜻하는 말이었다. 즉 자신의 몸과 사회적 관계의 자유다. 그리스어에서 자유를 뜻하는 ‘엘레우세리아(eleutheria)’라는 말은 인도유럽어 leudh 에서 나왔다고 추정되는데 독일어에서 ‘사람들’ ‘족속’을 뜻하는 leute는 그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말이다. 그런데 노예와 구별하기 위해 자신의 집단을 ‘자유인의 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자유로운’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가 자유로운 인간과 자유롭지 못한 노예를 구별하는 의미로 처음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중세까지의 동질적인 자유가 아니라 외부로만 무한히 확대되는 자유, 특히 소유의 자유로 변했다. 소유를 뜻하는 property란 라틴어의 pro-prius 에서 비롯되었고 prius란 위에서 본 priio에서 나왔다. 그런데 pro-prius에는 친족관계만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관계도 포함되었다. 즉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동질성을 추구했다. 로마인에게 소유권이란 포획물, 즉 손으로 취득한 것(mancipium)이었다. 자기 몸의 활동으로 취한 것은 자신의 몸과 같은

9) (일본)國際法學會編, 『國際關係法辭典』(제2판) (東京: 三省堂, 2005), p.763참조: 김효진, 『근대한국의 국가사상-국권회복과 민권수호』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0), pp.465-466; 박배근, 「한국 병합조약관련의 효력과 국가대표의 매수」 『서울국제법연구』제17권 제2호 통권33호, (서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0.12), p.170

10) 번역경위에 대해서는, 김효진, 『근대한국의 국가사상-국권회복과 민권수호』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pp.464-482; 박배근, 「한국 병합조약관련의 효력과 국가대표의 매수」 『서울국제법연구』제17권 제2호 통권33호, (서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0.12), p.170

11) 김효진, 『근대한국의 국가사상-국권회복과 민권수호』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pp.439-461; 박배근, 「한국 병합조약관련의 효력과 국가대표의 매수」 『서울국제법연구』제17권 제2호 통권33호, (서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0.12), p.172

12) 마루야마 마사오, 가토 슈이치/ 임성모 역, 『번역과 일본의 근대』, (서울: 이산, 2000), p.202

13) 김용구,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동양 예와 서양공법』, (나남출판, 1997), p.178

것, 자기 몸의 연장이었다. 이는 국가권력이나 공동체의 승인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로마인의 소유권은 현대소유권으로 재현되었다. 여기서 노동가치설이 나왔고 마르크스에까지 이어졌다. 현대의 소유권은 국가에 대한 불가침까지 주장한 강력한 절대적 것이었다.¹⁴⁾

민중

‘민중’이라는 말은 동양 고전에서 합당한 유래를 찾기 어렵고, 그렇다고 근대 서양의 정치 언어를 번역한 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일반에서는 민중을 영어 ‘people’의 번역어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더욱 날카로운 정치적 의미가 가미된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창작어이다. 영어의 ‘피플(people)’이란 말은 일본에서 막부 말에 ‘인민(人民)’으로 번역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고, ‘네이션(nation)’은 ‘민족(民族)’으로 1870년대에 번역되어 20세기에 들어와서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그에 반하여 민중은 서양의 어떤 정치 언어의 번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말은 근대 서구 사상과 정치 언어들이 도입되어 널리 사용되는 가운데 한자권인 동북아 삼국 간에 독창적으로 만들어지고 쓰여 온 말이었다.¹⁵⁾

‘민중’은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만들어져, 중국을 거쳐 식민지 조선으로 들어온 말이었다. ‘민중’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888년 일본의 자유 민권 운동을 대표하는 사상가인 나카에 초민¹⁶⁾의 『국회론』에 처음 나타났다고 한다. 여기에 민중이라는 말은 당시의 자유 민권 운동에서 주로 쓰이던 ‘평민(平民)’이라는 말과 유사하면서도 애매한 뜻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민중’이라는 말이 다시 쓰인 것은 1901년 나카에 초민의 사후 그의 제자 고토쿠 슈스이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였다고 한다. 미국에서 발표된 「사회혁명당선언」에서 ‘백만민중’이라는 말을 세 번 사용했다. 그 후에 민중이라는 말을 차용하여 자주 사용했던 사람은 중국의 혁명사상가인 리다자오와 마오쩌둥이었다.¹⁷⁾ 조선에서는 1908년 단재 신채호가 민중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민중’은 ‘국민’이나 ‘민족’과 비슷한 뜻으로 “국가를 희망”하는 정치적 의미를 가진 많은 사람들의 뜻으로 쓰였다. 아마도 ‘국민(國民)’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만든 말이라서 기피되었고, 민중이라는 말에 정치적 뜻이 뚜렷하게 새겨지지 않은 때라 큰 의미 없이 사용했다. 그 이후에는 1919년에 최남선이 「기미독립선언서」에 썼다. 그러나 이때도 ‘민중’은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수많은 사람들, ‘군중’을 지칭하는 말로 읽힌다. 즉 만민공동회 때 서울의 큰길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의 이미지를 가리키지만 특정한 정치 이념이나 혁명 이론을 갖고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3.1운동 이후에 ‘민중’이라는 단어는 일간신문 사설에 가끔 등장했지만 ‘많은 무리’ 이상의 뜻은 아니었고, 특히 당시의 조선 신문들이 ‘국민’ 즉 ‘고국민(國民)’이라는 일본에서 만든 말을 쓰기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중’이 조선에서 강한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된 것은 신채호의 역할이 컸다. 1923년 그는 「조선혁명선언」에서 아나키즘 사상과 결합하여 “민중의 직접혁명”을 주창한다. 이것은 볼셰비키식 혁명에 대한 반대를 뜻하는데, 인민은 그저 혁명 엘리트의 지도를 따라 혁명에 동원되었다가 다시 노예 상태로 회귀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 스스로 펼쳐 일어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신채호는 ‘인민’이라는 말과 ‘민중’이라는 말을 대비시킨다. 인민이란 구시대에 국가의 노예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며, 특수세력의 지도를 받아 혁명에 참여하여 다시 ‘특수세

14) 박흥규, 『자유란 무엇인가: 공존을 위한 ‘상관자유’를 찾아서』, (문학동네)

15) 최정운, 『한국인의 탄생』, p.485

16) 자유민권 파는 후쿠자와 같은 사람들보다 한 세대 뒤의 사람들이다. 나카에 초민은 자유당계열 중에서 예외적으로 외국에 나갔다. 1871년 파리코뮌 때 나갔다. 마루야마 마사오, 『번역과 일본의 근대』, p.56

17) 최정운, 『한국인의 탄생』, p.486

력'에 의해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반면, 민중이란 직접혁명에 '자기(自己)'를 위하여 참가하는, 혁명에 스스로 나서는 사람들을 말한다. 여기에서 인민이란 혁명당, 즉 혁명을 획책하는 특수세력의 지도를 받아 움직이는 사람이며, 민중이란 특정한 사회적, 계급적 정체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에 직접 자기를 위하여 나서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¹⁸⁾

신채호에 따르면, 인민과 민중은 실제로는 같은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들 외부의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계몽되거나 동원되는 존재이나' 아니면 '그 스스로 떨쳐 일어서 직접혁명에 나서는 존재나' 하는 측면에서 의미상의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신채호는 민중의 각성은 민중들의 고유한 자산인 '폭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20세기에 동북아 지역에서 만들어져 쓰이기 시작하여 애매한 정치적 의미만을 갖고 있던 민중이라는 말은 이렇게 신채호에 의해서 급진적인 정치 언어의 위상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공통적으로 '민중'이라는 말은 '백성 민(民)'에 '무리 중(衆)'을 합하여 '국가에 속하는 수많은 군중들, 큰 무리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혜라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밀어붙이는 힘, 엄청난 규모의 물리적 완력에 초점이 맞추어진 말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백만민중(百萬民衆)'이라는 쓰임새는 단적으로 많은 사람이라는 군중의 규모에 착안한 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중'이란 '정치적 의미를 갖는 육체적 힘으로 구성된 수많은 군중들' 정도의 뜻으로 만들어진 말이며 그렇게 쓰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20년대 전까지는 '민중'이라는 말은 서서히 정치적 혁명적 의미의 작은 조각들이 그 안에 모여들고 쌓여가는 과정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민중이라는 말은 혁명을 생각하던 사람들, 나아가서 혁명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다.¹⁹⁾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중국과 일본에서는 '민중'이라는 말이 잘 쓰이지 않으며 거의 잊혀졌다는 것이다. 현대 중국에서는 민중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인민대중(人民大衆)'의 준말이라고 알려져 있을 뿐, 한국에서 쓰이는 것과 같은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표준 사전인 『광사원(廣辭苑)』에 '민중'이라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중예술(民衆藝術)'이라는 말은 나와 있으나 '민중'은 없다. 동북아 삼국 지식인들이 창안한 이 말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최정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민중'이라는 말은 1920년대를 지나면서 좌파적 의미가 충만한 말이었으며 나아가서 지식인 혁명당을 거부하는 아나키스트적인 말이었기에 좌우(左右)의 정치권력에 의해서 말살되어 버렸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 민중은 1920년대까지 마오쩌둥도 즐겨 쓰던 말이었지만 1930년대 혁명이 진행되며 사라져버렸다. 이것은 민중이라는 말이 지식인 등 다른 계급의 지도를 거부하며 끝없이 저항하고 봉기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만큼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위험한 말이었기 때문이다.²⁰⁾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왜 '민중'이라는 말이 이토록 끈질기게 살아남아 5천만 민중의 가슴속에 펴떡이고 있을까? 심지어 권력의 지배 기구인 경찰마저도 스스로를 '민중의 지팡이'라고 표현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한국에서도 한국전쟁 기간에 민중이라는 말이 사라졌지만 1970년대 말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부활했고 급기야 1980년대 강력한 저항 운동 속에서 5.18민중항쟁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최정운 교수는 이것이 가

18) 최정운, 『한국인의 탄생』, p.490

19) 최정운, 『한국인의 탄생』, p.486~487

20) 최정운, 『한국인의 탄생』, p.494

능한 이유를 우리 문학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벽초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에서 찾고 있다. 홍명희는 『임꺽정』에서 ‘민중’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소설에서 “뜨거운 피와 살을 가진 살아있는 민중”을 형상화함으로써 우리의 역사적 문화적 무의식 속에 민중의 코드를 깊숙이 심어놓았고, 그를 통해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경로로 ‘민중’이 한국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다.

2. 사상만들기

헤겔이 지적하듯 칸트의 의무 개념은 지배라는 구조에서 보편적 지배를 관철하기 위한 개념이다. 보편적 개념에는 이미 지배가 작동하고 있다. 지배 이념인 것이다. 개화기(1894-1910) 개명세력의 지배이념 만들기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다.

1. 루소, 로크: 천부인권론, 자유주의 -독립신문, 개신교계열
2. 블룬칠리: 국가론-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계열
3. 스펜서: 민족주의-신채호 박은식, 장지연

그러나 1910년 조국이 병탄되면서 운동가들은 이들 이념을 거의 폐기한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 더 빨리 열심히 자강을 하기만 하면 일본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일본은 영국의 자유사상, 프랑스의 혁명사상을 만지작거렸지만 최종적으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독일사상이었고 독일 입헌군주제였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 따위는 포기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은 수렴되었다. 조선은 병탄직후에야 그 모든 것이 일본이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들 이념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이들 이념에 우리가 폐기 당한 셈이었다.

1919년 3.1운동은 사상사에 일대변혁을 가져왔다. 신채호의 민족주의도 무정부주의로 변했고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인 박은식도 유학자, 양명학자에서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까지 독립운동과 혁명운동의 가장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한 것은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였다. 그러나 초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었다. 이 간극을 완벽히 해결한 사상이론가가 이동휘와 박진순이다. 이동휘는 만주 용정에서 활동할 때 까지만해도 독실한 기독교주의자였다. 그러나 만주에서조차 활동할 수 없어 연해주로 활동 무대를 옮긴 뒤 1918년 한국최초의 근대정당인 한인사회당을 만들고 모스크바의 레닌에게 그의 비서이자 이론가인 20대의 청년 박진순을 파견한다. 박진순은 불과 몇 달 동안 서양 진보 사상의 모든 흐름을 학습하고 레닌과 함께한 토론에서 민족해방운동론을 만들어낸다. 이는 1920년 7월 레닌의 「민족식민지 문제에 관한 테제」로 발표되었다.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통일은 실천적으로 큰 힘을 발휘했다. 민중의 형편과 정황에 맞게 유연한 민족운동전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윤식사회장운동을 시작으로 민립대학건립운동등 민족주의계열운동으로 알려진 대다수의 운동은 이동휘파의 영향력하에 있었다.

1920년대 후반까지 만주지역의 사회주의 독립운동은 중국과 조선의 국적 구분이 없었다. 용정 출신 조선족으로 중국공산당 1호 당원이 된 한락연의 행적에서 이같은 실례를 볼 수 있다. 1919년 21세이던 한락연은 3.13반일시위에 적극 참가하여 태극기를 만들어 시위자들에게 나누어주었고 자기도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대오의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독립과 반제구호를 외쳤다. 연말에 일본 군경의 체포를 피해 그는 블라디보스톡으로 피신하였고 거기에서

이동회를 알게 되었으며 한인사회당에 가입하였다. 1920년 이동회와 함께 상해에 가서 고려공산당 창립사업에 참가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경호사업을 하였다. 고려공산당원인 김립과 함께 레닌이 지원한 독립운동자금을 관리했다. 김립이 김구에 의해 암살당한 뒤에는 부안출신의 김철수가 이 자금을 관리했다. 5월에 이동회 등이 상해에서 첫 조선문 인쇄공장을 차리고 「공산당선언」, 「로씨야 공산당 강령」, 「홍군」, 「홍기」를 번역 출판하였다. 그리고 리대소가 한락연에게 선물한 수십종의 『신청년』잡지의 자료들을 조선문으로 인쇄, 출판하였다. 1922년 중국공산당의 초기 지도자의 한사람인 채화삼이 상해에서 『향도』잡지를 창간하자 이 잡지의 열독자로서 채화삼과 사귀게 되었고 그의 영향으로 중국공산당에 접근하기 시작, 1923년 여름 상해에서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 그는 중국공산당원으로서 봉천에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를 설립한 핵심활동가로 중국공산당사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전히 만주의 조선족이 민족적 정체성을 우리와 함께 하면서도 국가정체성을 중공으로 하는 것에 대해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민족과 국민은 항상 동일해야 한다는 전제를 벗어던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주의 조선족은 민족과 국민이 얼마든지 분리될 수 있고 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독립운동과정에서 어떤 사상에 따라 민족과 국민을 형성하고 이해했는가의 차이이기도 하다. 민족과 국민이 분리될 수 없기에 남북간의 통일은 반드시 하나의 국민이 되어야한다는 고착된 의식이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과 북이 다른 국민으로 살아도 같은 민족으로서 얼마든지 통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안 되는 연원에는 바로 독립운동과정에서의 ‘국민 만들기’가 있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대자본가와 군부중심의 국가구분에서 민족은 파시즘적 민족이 되지만 노동자, 농민과 민중의 단결이 중심이 되었을 때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민중적 민족이 된다는 경험을 독립운동과정에서 우리는 하게 되었다. 이로써 제국주의 국가에 포섭된 국민이 아닌 민중적 민족으로서의 국민이 형성된 것이다. 안창호선생의 비서였던 구익균은 사망 직전 이런 말을 남기셨다한다. “통일운동이 독립운동이다.”

3. 전략만들기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지개략』에서 보이듯 메이지유신의 개혁가들이 설정한 목표는 국가건설이 아니라 문명건설이었다. 사쿠마 쇼잔 문화의 사카모토 료마, 요시다 쇼인, 가토 히로유키 등은 주로 국가 건설에 머물러 있었다면, 후쿠자와는 더 크게 보았다. 이것이 메이지 세력의 아시아주의가 되었고 이후 ‘대동아공영권’으로 현실화 되었다. 조선 식민지에 이어 이같은 사상을 실현시킨 것이 만주국이다. 만주국의 이념은 오족협화이다. 한족, 몽골족, 일본, 조선, 만주족 등 5개 민족의 협화를 내세움으로써 국가를 넘어선 문명차원의 경략을 구상한 것이다. 일제를 통해 유입된 사상으로는 일제의 국가적, 문명적 구상을 극복할 수 없다. 조선의 독립이란 주제에서는 한 치의 흔들림이 없던 조선의 혁명가들도 서양에 맞서 동양이 단결해야 한다는 일본의 아시아주의에서는 크게 동요했다. 쑨원도 모택동과 합작하던 시기인 1924년 일본에 건너가서 ‘대아시아주의’를 연설한다. 인도의 네루 역시 사회주의자였지만 ‘동양평화론’을 주창한다. 물론 이들 혁명가들이 일본에 설득되진 않았지만 많은 전향 지식인들은 자신들을 변호하는 논리로 바로 아시아주의를 내세웠다. 만주국 건국대학의 교수로 초빙된 최남선이 ‘불함문화론’이란 아시아주의를 다시 꺼내든 것도 이광수가 ‘유정’을 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본의 만주국 구상은 독자적인 창조물인가 아니면 어디에서 참고한 것일까? 결론을 말하면 일본은 자신들이 최우선 적국으로 생각하던 소비에트 러시아의 극동공화국을 참고해왔다. 극

동공화국은 레닌의 유연한 전략의 백미를 보여주는 국가이다. 1920년 크라스노체코프는 미국 사회당을 만들고 변호사를 했던 인물로 1917년 12월초 하바로프스크에서 소비에트의 완전한 점거로 완전한 승리를 얻은 후 극동지방소비에트집행위원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레닌에게 위성국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어 사회주의 소비에트러시아와 자본주의 국가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자는 '완충국가론'을 제기했다. 레닌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극동공화국이 성립된다. 그는 극동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극동공화국은 1922년까지 2년간 존속했다. 이때 그는 김 알렉산드라, 이동휘등의 한인사회당 창당을 도왔고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최대 후원자가 되었다. 극동공화국은 민족식민지테제라는 사상의 연장선에 있었던 것이다.

사회주의자들 특히 민족식민지테제를 이해한 사회주의자들만이 이같은 전략적 혼동에서 동요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의 아시아주의를 넘어서는 세계전략을 이미 획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국의 신민이 되느냐 새로운 세계체계를 주도할 인민, 민족, 국민이 되느냐는 전략만들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4. 경제만들기

추가자료로 대체

5. 정치만들기

조선족역사가들은 이동휘와 함께 한인사회당원으로서 상해에 입성한 한락연이 중국공산당원이 된 이유 중 하나를 한인 사회주의 운동내의 분열로 드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해석은 한국의 진보운동을 폐해를 분열로 보는 부정적 인상과 연관되어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치를 결과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정치력에 한계가 있었던 점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정치만들기의 결정적 역할은 자유시참변과 민생단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사회나 분열의 요인은 안고 있다. 그러나 분열이 충돌이나 전쟁으로 가느냐, 더 큰 통합의 계기로 가느냐는 정치의 힘에 달려있다. 마키아벨리의 『로마사강의』 1권 47장의 파쿠비우스 테제는 정치에 관해 가장 많은 고민을 던지는 사례이다.

‘로마인이 한니발에게 패한 뒤 카푸아도 내란위기에 빠졌는데 인민과 원로원의 반목은 수습할 길이 없었다. 당시 최고직에 있던 파쿠비우스 칼라누스(Pacuvius Calavus)는 위기의 성격을 판단한 다음 자기의 직권으로 인민과 귀족을 화해시키려고 작정했다. 그는 원로원을 소집하여 몰살위기에 처한 상황을 전하고 귀족들을 가두는 조건으로 자신에게 사태수습을 맡기면 화해의 길을 찾겠다고 제시했다. 다음엔 인민을 소집했다. “만약 여러분이 새 후임자를 결정하고 나면 그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약속하여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막상 인민들내에서 서로 그는 안 된다고 할 뿐 아무도 뽑지를 못했다. 그러자 그는 호기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은 원로원은 필요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임명하는 일에는 찬동하지 않는 것 같으니 차라리 지금의 원로원과 화해를 하는 게 어떨가”라고 제안했다. 별다른 수가 없었으므로 인민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²¹⁾

마키아벨리는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21) Nicolo Machiavelli, *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i Tito Livio*/황문수 역, 『세계사상전집』15 (서울: 학원출판공사, 1983), pp.306~308

‘인민은 자기에게 관련되는 사항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려할 때 잘못을 저지르기 쉬우며 반대로 각각 구체적인 예를 따라 생각을 추진하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마키아벨리는 정치권에 들어가기 전 개개의 현상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선동가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있다. 미국의 사회주의자 올린 라이트는 『리얼 유토피아』에서 우리가 손에 짚 수 있는 현실속의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포르투 알레그레 시의 ‘참여예산제도’²²⁾를 소개한다. 그러나 이 책이 나오기 10년 전인 2000년 민주노동당은 브라질 노동당과 교류하며 참여예산제를 한국에 소개하고, 4년 뒤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에서 이를 도입 시행했다. 이 물꼬가 강물이 되어 이명박정권하에서 놀랍게도 법률로 의무화되었다. 보수정권조차 강제한 구체성의 힘이다. 정치에서 구체성의 중요성과 더불어 그것을 실행할 주체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선 안된다.

‘경제정책의 세밀함과 현실성은 당연히 갖춰야하고 진보정당일수록 더욱 그래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 핵심은 그 정책을 밀고나갈 경제주체의 힘이다. 그 경제주체는 다름 아닌 조직된 노동자다’²³⁾

마키아벨리는 새로운 군주에 대해 말했고 그람시는 현대의 군주에 대해 언급한다. 알튀세르에 의하면 그람시의 현대적 군주는 맑스-레닌주의적 노동자정당이다. 그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다.²⁴⁾ 오늘날 한국에서 현대적 군주를 찾는다면 그것은 ‘민중자신의 정당’일 것이다. 레닌도 볼셰비키 당에 지식인출신 혁명가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걱정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민중 스스로 완전한 주인인 정당은 요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젠 가능하고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치는 ‘지배하고’ ‘지배받을’ 권리로서의 정치였다. 자유시민이 소질과 역할에 따라 지배하고, 언제든 또 다른 이로부터 지배받을 수 있는 것이 정치였다. 그러나 당시의 자유시민이란 매우 한정된 귀족들이었다. 이제 역사는 한바퀴를 돌아 민중이 곧 군주가 되는,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으로 했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가 실현되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따라서 그 주체가 민중 자신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파쿠비우스 테제는 자유주의 정치학자들에 의해 갈등과 충돌을 법과 제도로 풀어내는 정치의 모범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나는 파쿠비우스 테제의 다른 측면을 본다. 파쿠비우스가 정치의 정확한 시점을 판단하는 능력은 높이 칭송받을 만하지만 그 같은 정치력은 시민들의 봉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같은 혼란과 위기가 없었다면 그는 귀족들을 설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치력 이전에 정치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그것은 민중의 힘이다. 청나라 옹정제와 마오쩌둥의 언어를 빌리면 대란(大亂)이다. 대란은 틀을 깨는 것이다.

‘진보정치란 헌법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틀 자체를 확장 발전시키는 것이다’²⁵⁾

22) Eric Olin Wright, *Envisioning Real Utopia*, (2010)/권화현 역, 『리얼 유토피아』, (파주: 들녘, 2012), pp.222~237

23) 이정희, 『진보를 복기하다』, (파주: 들녘, 2016), pp.109,119

24) Louis Althusser, *Machiavel et nous 1972~1986*, (Écrits philosophiques et politiques. Tome II, 1997)/ 오덕근 김정환 역, 『마키아벨리의 가면』, (서울: 이후, 2001), p.36

25) 이정희, 『진보를 복기하다』, (파주: 들녘, 2016), p.302

칼 슈미트(Carl Schmitt)정치론의 반전이다. 슈미트는 주권자의 권력이란 법 밖에서 법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했다.²⁶⁾ 이는 법치주의자인 한스 켈젠(Hans Kelsen)의 ‘권력은 법 안에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파시즘적 도전이었다.²⁷⁾ 헌법재판소의 진보당해산과 의원직 박탈은 슈미트이론의 정확한 적용사례라고 나는 확신한다. 슈미트에게 주권자는 한명이다. 그러나 실질적 주권자가 국민이라면 어떻게 될까? 국민이 법 밖에서 법을 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권이 된다. ‘대란없이 대치없다’는 정치원리는 독립운동과정에서 배워야할 핵심원리가 아닐까한다.

26) Carl Schmitt, 김항 역, 『정치신학: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서울: 그린비, 2010), p.18

27) 한스 켈젠(Hans Kelsen)은 1881년 생으로 슈미트보다 7살 위다. 오스트리아에서 순수법학파를 창설했다. 1차대전 후 오스트리아헌법제정에 관여하면서 최초로 헌법재판소제도를 만들었다. 소련의 국제법학자인 툰킨(Tunkin)조차 그를 유엔헌장의 가장 탁월한 해설자로 인정한다.